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회로

**최상급 부총리·안덕근 장관 23일 미국행
미측 협의 제안…방위비·LNG 등 협상카드**

정부가 이번주 중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출국해 다음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2+2 통상협

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

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으며, 세부 일정 및 의제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미국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세 밸류 하루만인 10일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시간을 빼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는 방위비 분담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및 구매, 조선업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에 “아직 결정 안 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협상을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도민 농락”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 1)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해 신설을 염원해왔던 전남 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도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호기자



대선승리를 다짐하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과 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용섭 “다당제 전환해야
선출직 사실상 민주당 임명”**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독점체제인 광주·전남의 정치지향이 후진적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과 다당제 전환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으로 훌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금요조찬 포럼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광주는 특정 정당의 독점체제로 인해 각종 자원배분에서 소외된 현수답도시다. 흔히들 정치 도시이고 민주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지역정치는 매우 후진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선출직은 시민이 뽑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죽”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75년 간 전국 인구는 2.5배, 영남은 2배, 충청도는 1.8배 증가했지만 호남은 509만에서 499만명으로 10만명이 감소했다”며 “광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풍요를 창출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날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해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지역성을 특화한 산업화, 혁신적인 리더를 제안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당제 기반의 정당간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정권에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민간 자문단 운영 개시

항공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자문단 구성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이해를 들키기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법은 공포 2개월 뒤 시행되지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청에 따

라 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주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문지식 제공 ▲질의 조력 ▲해설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돋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진행하며, 유가족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원한다.

또한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사고조사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특히, 밸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담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도기자

국힘 1차 경선 조별 토론회…민생·경제·복지 주제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밖에 없다. 반도체, 원전 등 협상카드도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날아가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치를 것”이라며 “많은 분이 관세, 안보 문제를 따로 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방위비·관세 문제의 ‘원수’를 ‘패키지’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표면적으로는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라며 “주상적인 동맹국의 가치보다 실리를 주고받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안보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건 남북

간 핵 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토식 핵 공유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핵 안보 문서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철우 후보는 “이번 APEC을 경주에서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꼭 참석하게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데려오게 하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같이 ‘경주 빅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며 “경주에서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것들이 많다”고 했다.

/뉴스

“발달·정신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이재명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 확충, 돌봄서비스 강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른 종종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자치분권 강화·재정분권 실현해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토론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8일 “중장집권적 권리구조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주권재민 가치를 실현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최영호)의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국민주권전국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재정 분권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 약 50%에 불과하다”며 “중요 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회는 제한된 역할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2004년 주민투표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는 등 시민 참여가 낮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역량과 경험의 격차도 존재한다”고 지방자치 분권의 사회적 측면을 분석했다.

신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 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의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지방자치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제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광역 시도당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식구 갑짜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당의 윤리심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도기 기자

민주 후보들, 울산서 두번째 영남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서 협지 민심 구애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20일 경북 울산에서 열린 두 번째 순회 경선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협지 민심 공략’에 나섰다.

경남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김경수 후보는 “영남의 아들”이라고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는 대선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동포에서 독립운동하듯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라고 영남 당원들을 친케 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1998년 IMF(외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위기까지 매번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 대선 경선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동포에서 독립운동하듯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라고 영남 당원들을 친케 세웠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에는 엄정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도 살펴야”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우(민주당·완도 1) 의원이 최근 기획 조정실 주경 심사에서 “섬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해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이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